

재정위기 속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및 전망

오태현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차 례 ●●●

1. 재정위기 속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2. 정치 리스크와 유럽 재정위기 심화
3.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요인
4.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전망

주요 내용 ●●●

- ▶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해 유럽 각국은 집권당의 교체, 급진성향 정당의 부상 같은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도 극우정당의 득세 현상이 나타남.
- ▶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거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됨.
 - 프랑스 대선 이전에는 올랑드의 당선이 독·프 관계는 물론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양국의 정치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총선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정당의 부상과 함께 제2차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가 공론화되면서 유럽발 위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위기를 겪으며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중요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독일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과 프랑스가 EU 27개국의 모든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양국이 EU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재정위기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독일정부는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바, 향후 독일의 정치적 결단이 재정위기는 물론 EU 통합에도 중요함.
- ▶ EU 통합이 정치적인 동인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들 간 갈등 극복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화해온 과거 경험을 살펴볼 때, 현재의 유로존 위기가 유로존의 붕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낮음.
 - 단일화폐 사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독일이 재정준칙 강화를 조건으로 발행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연합 또는 은행연합과 같은 통합 심화는 중장기적인 목표인 만큼 ECB의 역할 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리더십 못지않게 그리스의 경우처럼 개별 국가 내의 정치변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어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돌발변수 발생에 대비해야 함.

1. 재정위기 속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 **(집권당 교체)**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은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교체되는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음.

- 2009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집권당 교체가 일어난 국가는 11개국에 달함(표 1 참고).
- (영국) 10년간 재무장관을 지낸 뒤 2007년 총리에 오른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후보에게 패배함.
- (네덜란드) 100년 만에 중도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제1당의 위치를 점함.
- (아일랜드) 총선에서 우파인 공화당이 집권 14년 만에 같은 성향의 우파정당인 통일아일랜드당에 패배함.
- (핀란드) 채무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에 반대하는 극우성향의 진정한 핀란드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중도우파 및 중도좌파를 포함한 보수연정이 출범함.
- (포르투갈) 집권당인 사회당의 사파테로 총리가 2011년 6월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선거에서 우파인 사회민주당에 패배함.
- (덴마크) 채무위기 속 긴축과 재정지출 확대 논란 속에서 경기부양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중도좌파의 사회당이 중도우파에 승리함.
- (그리스) 2011년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인 사회당이 패배하고 신민주당이 주도한 좌우연정이 구성됨.

표 1. 재정위기 속 정치변화를 겪은 국가

일자	국가	정치변화
2010.5.6	영국	좌파 → 우파
2010.6.9	네덜란드	우파 → 우파
2011.2.25	아일랜드	우파 → 좌우연정
2011.4.17	핀란드	우파 → 좌우연정
2011.6.5	포르투갈	좌파 → 우파
2011.9.15	덴마크	우파 → 좌파
2011.11.1	그리스	좌파 → 우파주도 연정
2011.11.4	이탈리아	우파 → 중도
2011.11.20	스페인	좌파 → 우파
2011.12.4	슬로베니아	우파 → 좌파
2012.4	네덜란드	우파내각 사임(총선 예정)
2012.5.6	프랑스	우파 → 좌파
2012.5.6	그리스	우파주도 연정 → 연정구성 실패

자료: 언론 종합.

- 유럽에서 불고 있는 집권당 교체는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측면보다는, 경제난과 긴축재정에 따른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국가를 살펴보면 2개국을 제외한 9개국에서 집권당이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바뀜.

■ **(급진성향의 정당 부상)** 재정위기 심화로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던 급진성향의 정당들이 정치일선에 등장함에 따라 군소정당이 많은 유럽 정치에서 이들 정당이 국내정책은 물론 EU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

- 저성장 속 실업률 악화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축소는 유럽 각국에서 국수주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급진성향의 정당이 부상하는 데 일조함.
- o 특히 극우정당은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 반이민정책, 반이슬람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EU 통합 심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음.

표 2.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의석 비율

국가	정당	의석 비율	국가	정당	의석 비율
프랑스	국민전선(FN)	17.9%	덴마크	국민당	12.3%
영국	국민당(BNP)	1.9%	스웨덴	민주당	5.7%
벨기에	플레미쉬이당	7.8%	핀란드	진정한 핀란드인	19.1%
노르웨이	진보당	22.9%	오스트리아	자유당	17.5%
스위스	국민당	31.0%	헝가리	요비크	16.7%
네덜란드	자유당	15.5%	불가리아	아타카	9.4%
이탈리아	북부동맹	8.3%	그리스	황금새벽당	6.97%

자료: Financial Times; 슈피겔.

- (유럽의회 의 극우정당) 지난 2009년 7차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EU 회원국 의회에서보다 더 많은 극우정당이 득세하면서 전체 의석의 13%를 확보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지역에서 실업률이 급증하자 극우정당들은 치안, 이민, 고용불안 등의 이슈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극함.¹⁾

2. 정치 리스크와 유럽 재정위기 심화

가. 프랑스 대선의 영향: 재정위기 해법의 기초 변화

- 2012년 5월 6일 열린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사르코지를 누름으로써 17년 만에 좌파정당이 집권하게 됨.
- 긴축을 강조하는 사르코지와 성장을 강조하는 올랑드 간의 대결에서 국민들은 사르코지 정권으로부터의 변화를 선택함.
- (국내정책) 올랑드 대통령은 성장,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함.
 - o 올랑드 대통령은 과도한 긴축재정이 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며 사르코지의 경제정책을 비판함.
 - o 올랑드 대통령은 증세 및 조세감면 혜택축소를 통해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제시함.
 - * 최고소득세율 상향 조정(41% → 75%), 대기업 법인세 인상(33% → 35%), 금융거래세 신설

1)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이탈리아 북부동맹(Lega Nord)은 10.2%의 득표율로 9석을 획득하였으며, 네덜란드의 자유당(Party for Freedom)은 17%로 4석, 영국의 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은 6.5%로 2석,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13.1%로 2석, 헝가리의 요비크(Jobbik)는 14.8%로 3석, 덴마크의 국민당이 14.8%로 2석을 차지함.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17년까지 교사직 6만 개 신설, 청년층 15만 명에게 고용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및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함.
- 사회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연금 최소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환원하고, 이로 인한 연금지출액 부담증가는 고용주 및 고용인의 연금납입액을 각각 0.5%포인트씩 인상시켜 보전하기로 함.
- **(대외정책)** 올란드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긴축을 통한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이라는 메르켈과 사르코지의 정책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언급함(표 3 참고).
- 올란드 대통령은 신재정협약에 성장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며 신재정협약의 수정 또는 성장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올란드 대통령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본드 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함.

표 3. 올란드와 메르켈의 EU 시안별 정책 입장

안건	프랑스 올란드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신재정협약 수정	수정 또는 성장협약 추가	수정에 반대 또는 성장협약 가능성
재정긴축법안	헌법화 반대, 특별법으로 대체	재정적자 상한선(debt brake)의 헌법화
유로본드 발행	찬성	반대
유럽투자은행 자본확충	자본확충 공약제시	자본확충 가능성 시사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경제위기에 적극 개입	인플레이션 조정에 한정
구제금융펀드(EFSF/ESM) 규모	1조 유로로 확대	5,000억 유로 유지
구제금융펀드 역할	은행면허 부여(차입 가능)	비상시 재원으로만 활용
금융거래세 도입	프랑스 단독 도입	전 EU 차원에서 점진적 도입

자료: 언론 종합.

- 올란드의 당선에 따라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독일과 프랑스 간 정치적 협력에 변화가 예상되나 극단적 대립이나 갈등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대선 직전 올란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양국간 협력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었음.
-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메르코지'로 불릴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고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함.

표 4.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협력 사례

독일	프랑스
콘라드 아데나워(우)	샤를 드골(우)
빌리 브란트(좌)	조르주 폼피두(우)
헬무트 슈미트(좌)	지스카르 데스탱(우)
헬무트 콜(우)	프랑수아 미테랑(좌)
게르하르트 슈뢰더(좌)	자크 시라크(우)
앙겔라 메르켈(우)	니콜라 사르코지(우)
앙겔라 메르켈(우)	프랑수아 올란드(좌)

주: 음영 부분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정치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EU 및 유로존 통합을 위해 협력을 보여준 사례임.
자료: 저자 작성.

- 그러나 과거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정치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EU 및 유로존 확대를 위한 충분한 협력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정치적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표 4 참고).

- 메르켈 총리도 프랑스 대선을 전후하여 올랑드 당선자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낼 만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위기심화를 경계함.
- 프랑스와 독일 모두 EU 및 유로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들의 노력이 갈등과 대립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임.
- 5월 16일 올랑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긴축 vs. 성장' 의 논란 속에서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함.
- 특히 양국은 올해 5월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나. 그리스 총선의 영향: 재정위기의 재연

■ 5월 6일 총선에서 연립여당인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반면, 긴축에 반대하던 급진좌파 연합당(Syriza)이 제2당으로 약진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음.

-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EU와 IMF에 긴축프로그램을 약속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구제금융 약속 이행에 차질이 생기게 됨.
- 1974년 군사정권 붕괴 이후 38년 동안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절대다수의 지지로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던 양당체제가 붕괴됨.²⁾
- 제1당인 신민주당과 제2당인 급진좌파연합당, 제3당인 사회당이 5월 17일까지 모두 연정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2차 총선이 불가피함.
- 급진좌파연합당은 긴축정책 철회, 그리스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등 5대 원칙을 통해 연정구성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함.

■ 오는 6월 17일로 예정된 2차 총선까지 그리스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유럽 재정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급진좌파연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긴축반대 민심에 편승해 2차 총선에서도 긴축반대를 통한 의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표 5 참고).
- 기존 정당인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총선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전환시키고, 급진좌파연합당 공약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공론화되자 긴축에 찬성하는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늘고 있어 선거일까지 정당 지지율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EU 및 유로존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물론 유로존 탈퇴를 가정한 시나리오 마련에 돌입함.³⁾

2) 총선결과 득표율(의석수): 신민주당(ND) 18.9%(108석), 급진좌파연합당(Syriza) 16.8%(52석), 사회당(PASOK) 13.2%(41석), 독립그리스당 10.6%(33석), 그리스공산당 8.5%(26석) 등.

3)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 5월 9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이사회는 그리스에 구제금융으로 지급해야 할 52억 유로 중 42억 유로를 5월 10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0억 유로는 6월까지 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표 5. 그리스 주요 정당들의 정치 성향 및 정책

정당	정치성향	유로존 진류	EU/IMF가 요구한 긴축프로그램 찬성	주요 정강
신민주당(ND)	중도우파/보수	○	○	긴축프로그램 수용 및 친성장 촉진책 이행
사회당(PASOK)	중도좌파	○	○	긴축프로그램 수용
급진좌파연합당(Syriza)	좌파	○	×	유로존 내에서의 일방적 디폴트 및 긴축프로그램 반대
공산당(KKE)	공산당	×	×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독립그리스당	우파	○	×	유로존 내의 일방적 디폴트 및 긴축프로그램 반대
민주좌파당	중도좌파/좌파	○	×	긴축프로그램 재협상
황금새벽당	극우	×	×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LAOS	우파	○	×	긴축프로그램 반대 및 ECB 대출 찬성
녹색당	좌파	○	×	대출프로그램 재협상
민주연합당	자유	○	○	긴축프로그램 수용 및 구조적 개혁에 집중

자료: Credit Suisse(2012).

3.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요인

-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는 위기국의 경제편더멘털 악화보다 EU 내 주요국의 선거결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 및 독·프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함.
 -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독일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며, 또한 그리스의 2차 총선결과에 따라 정치 리스크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이 상존함.
 - 이 글에서는 EU 및 유로존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결단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임.⁴⁾

가.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리더십

-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해법은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결단이 작용함.
 -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EU 및 유로존은 위기대응책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확산되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음.⁵⁾
 - 수많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실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임.
 -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적극적이 지원이 곧 프랑스 국익은 물론 유로존, 나아가 EU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함.

4) 그리스 리스크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 강유덕 외(2012),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점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John Van Overtveldt(2011), *The End of the Euro: The Uneasy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 반면, 독일은 재정준칙을 강조하며 재정위기 국가에 구제금융에 앞서 자구노력을 요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리더십이 없었다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EU 및 유로존의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개혁은 불가능했음(표 6 참고).⁶⁾

표 6. 유럽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 성과

이슈	주요 논쟁 및 결과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2010년 & 2011년)	- 프랑스의 선지원과 독일의 후지원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의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프랑스와 독일 간 그리스 구제금융에 합의
EFSF/ESM 설립 및 확대 (2010년 & 2011년)	-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신재정협약 체결 (2011년)	- 2011년 11월에 체결된 신재정협약은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 - GDP 대비 재정적자 3% 기준을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회원국 다수의 반대가 없는 한 자동적인 제재와 시정조치 부과
프로젝트 채권 발행 (2012년)	- 2억 3천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채권발행에 합의 - 동 채권은 EU 국가가 공동으로 발행해 도로나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로본드의 시험판이라 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변화 및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로본드 발행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임.
 - (유로본드 발행) 프랑스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로본드 발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독일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⁷⁾
 - (프랑스의 입장)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이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 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바 유로본드 도입은 재정위기 해결에 가장 확실한 방법임.
 - * 유로본드에 찬성하는 입장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간 확보, 국채금리 인하에 따른 재정조달비용 감소, 유동성 높은 유로 국채시장 발달에 기여 등의 효과를 제시함.
 - (독일의 입장) 유로본드가 재정적 부담을 높이고, 특히 재정위기국의 재정규율 준수여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함.
 - 최근 OECD와 IMF도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독일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ECB의 역할) 향후 경제위기 시 ECB의 역할 및 개입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이견도 조정이 필요한 사안임.
 - 프랑스는 ECB가 적극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EU 조약상 ECB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근거로 ECB 역할 확대에 반대함.
 - *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는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독일의 입장을 지지함.
 - 한시적으로 ECB는 2010년 5월부터 유로존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매입프로그램(SMP)⁸⁾을 가동했으나 독일은 대폭적인 국채매입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임.
 - ECB가 2011년 12월~2012년 2월 중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통해 유럽 은행에 1조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제도적 한계(통화정책을 통한 재정정책의 보완금지) 속에서 추진한 실질적인 양적완화로, ECB의 역할변화를 예고함.

6) Benedicta Marzinotto, Andre Sapir and Guntram B. Wolff(2011), "What Kind of Fiscal Union?" Bruegel Policy Brief 20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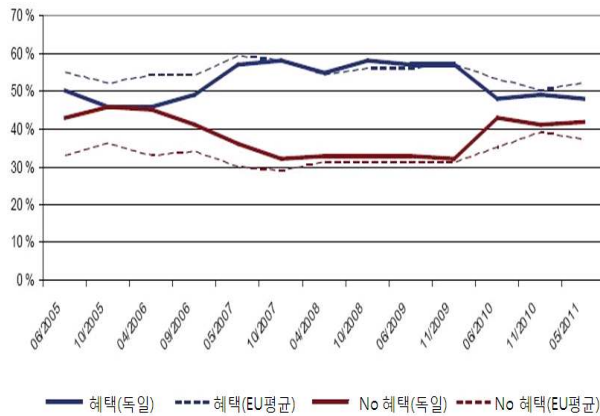
7) 강유탁·이현진(2011) 「최근 유로본드(Eurobond) 발행 논의와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11-3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ECB는 2010년 5월부터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함(2010.05.14 DECISION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of 14 May 2010 establishing a securities markets programme)(ECB/2010/5)(2010/281/EU). ECB는 물가상승 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매입이 ECB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나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함.

나. 독일의 정치적 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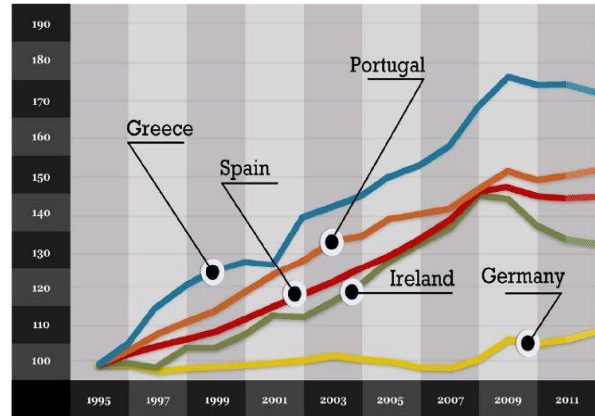
- 당초 조속한 위기해결에 대한 기대와 달리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유로존 붕괴 같은 위기 가능성이 계속되면서 독일의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이 커지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독일의 재정 지원과 역할에도 불구하고,⁹⁾ 독일 정치인들은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함.
 - 재정위기 이전에는 EU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일 국민이 약 60%였으나,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그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여 EU 평균을 하회함(그림 1 참고).

그림 1. “EU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응답자 비중, %)



자료: Timo Behr & Niklas Helwig(2012).

그림 2. 독일 및 남유럽 국가 간 단위노동비용 (단위: 1995=100)



자료: RMF(2012).

- 동시에 독일이 유럽 재정위기 해결과정에서 ‘선(先)개혁 후(後)지원’이라는 원칙으로 재정위기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대외적으로 독일 책임론이 제기됨.
 - 독일은 유럽 통합 초기에 정상국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 전쟁의 원죄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이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데 마지못해 참여해왔음.
 - 독일의 유로화 도입 찬성은 통독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협상결과였다가 것이 증론임.
 - 그러나 독일 경제가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EU 회원국들은 독일이 위기 시 과거처럼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함.
 - * EU GDP 대비 국가별 비중 : 독일(20.3%), 프랑스(15.8%), 영국(13.8%), 이탈리아(12.5%), 스페인(8.5%)
 -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높은 수출경쟁력과 대비되는 낮은 내수비중은 재정위기 동안에도 독일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던 원인이었음.
 - OECD는 5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높은 경제성장률만으로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
 - 유로화 사용의 최대수혜자가 독일이라는 주장은, 남유럽 국가의 부(富)가 유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독일과 같은 북유럽 국가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강조함.

9) Timothy Garton, Ash(2011, 6), “Everywhere, the European project is stalling. It needs a new German engine,” *The Guardian*,

- 독일의 높은 경쟁력은 구조적인 개혁과 혁신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해결의 책임을 둘러싼 독일에 대한 비판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유로존 가입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이 급증한 반면, 독일은 임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함(그림 2 참고).
 - 그림에도 불구하고 OECD는 독일이 임금인상을 통해 국내수요를 늘리는 한편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구조조정 과정의 고통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¹⁰⁾
- 독일의 정치적인 결단 없이는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가 자국의 세금이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부채를 갚는 데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함.
 - 재정위기가 악화될 때마다 독일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제도를 EU 차원에서 수용하게 만드는 전략을 활용함.
 - 위기 시 ECB의 역할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원칙적으로 EU 조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ECB의 역할 강화에 반대하고 있으나, 한시적인 ECB 국채매입프로그램처럼 협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전망

- 독일과 프랑스가 EU 27개 회원국의 모든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양국이 EU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독·프 협력)** EFSF/ESM은 물론 신재정협약은 독일과 프랑스 간 정치적 노력의 결과인 만큼 양국의 협력이 부재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재정위기를 겪으며 정치적인 입장차이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중요함.
 - 그리스 총선 이후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60%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3 참고).
 - **(유로본드 발행)** 독일과 프랑스가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독일이 재정준칙 강화를 조건으로 발행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위기국에서 국채발행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이 감소되지 않는 이상 재정적자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이들 재정위기국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함.
 - **(ECB의 역할 강화)** 단일통화의 구조적 문제점과 재정위기 완화를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 ECB의 역할강화에 대한 유로존 차원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경쟁력이 상이한 국가 간 단일화폐 사용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그림 4 참고).
 - *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 환율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에 따른 위기 가능성이 상존함.
 - 재정위기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유로존이 단기적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

10) OECD(2012), *OECD Economic Outlook*.

려움이 있음.

- 따라서 ECB가 위기 시 최종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EU 조약이 개정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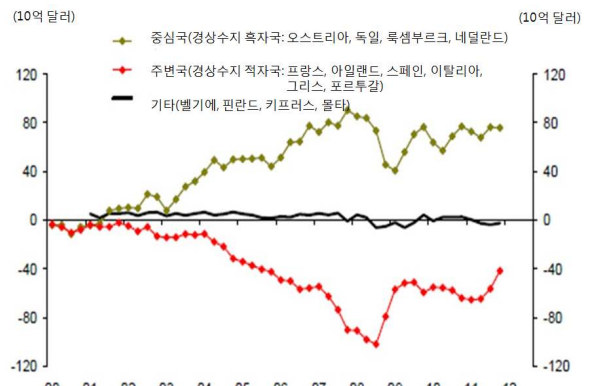
그림 3. 독일 메르켈 총리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The Economist(2012).

그림 4. 유로존 경상수지 추이



주: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제외

자료: National Sources, DB Global Markets Research.

■ 독일·프랑스 간 정치적 리더십 못지않게 그리스의 경우처럼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변화가 초래하는 리스크가 향후 유럽 재정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돌발변수 발생에 대비해야 함.

-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긴축에 반대하는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과반 정당이 한 곳도 없어 3~4개의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야 함.
-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그리스의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일정 및 결과에 주목해야 함.11)
- 5월 23일에 열린 EU 특별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6월 말로 예정된 EU 정상회담 때까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유럽 재정위기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하고 기존의 긴축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트로이카(EU, IMF, ECB)가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지원하는 것임.
- 안정 성향의 중장년층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연정구성 가능성이 증대됨.

표 7. 프랑스 대선 이후 EU의 주요 정치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정치일정	5월 15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취임식 및 독·프 정상회담
	5월 15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그리스 정국 불안, 스페인과 관련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달성 시한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의 문제 논의)
	5월 16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
	5월 23일	EU 특별정상회담
	6월 6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6월 17일	그리스 2차 총선
	6월 2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6월 28~29일	EU 정상회담

자료: 저자 작성.

11) 그리스의 정치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강유덕 외(2012) 참고.

부록

부록 글상자 1. 위기 이후 유로존의 방향

- 유로존의 미래에 대해 크게 현 수준의 통합유지, 통합심화, 통합 해체 또는 붕괴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됨(부록 그림 1 참고).¹⁾
 - (시나리오 1: 현 수준의 통합 유지) 재정위기를 통해 부각된 위기관리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와 초국가간주의(supranationalism)가 병합된 통합
 - 신재정협약을 통해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은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5% 이내로 유지해야 함.
 - 현 수준에서 각국은 여전히 재정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등이 요구됨.
 -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로존의 평균 성장률은 2011~16년 기간에 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장기적으로는 2%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유로존 중심 국가의 평균 성장률: 1.9%, PIIGS 평균 성장률: 0.7%
 - 신재정협약상의 엄격한 재정준칙을 준수할 경우 정부부채는 2016년 8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시나리오 2: 통합심화) 재정통합으로 한 단계 발전한 통합
 - 개별국이 갖고 있는 재정주권이 EU의 공동체 기구로 이전되나,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정치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완전한 재정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1의 통합과 달리 이 시나리오에서는 개별국의 부채가 공공의 부채로 전환되며,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재정수지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로존의 평균 성장률은 2011~16년 기간에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정부부채의 경우 2010년 80%에서 2016년 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 통합의 해체 또는 붕괴) PIIGS 국가들이 유로존에서 퇴출되고 양호한 경제를 보이고 있는 우량국가들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유로존으로 재편된 통합형태²⁾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라도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그 전염효과로 인해 PIIGS 국가들 모두가 유로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편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011~16년 기간에 -0.9%인 반면, PIIGS 국가들은 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 1과 2를 우선 시도한 후 모두 실패할 경우 시나리오 3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주: 1) McKinsey(2012), The Future of the Euro.

2)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새로운 유로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Oxford Economis and McKinsey(2012).

부록 그림 1. 통합유형별 거시경제지표 추정

